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과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20여명이 26일 북구 중흥 3동의 한 저소득층 세대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저소득층 7세대(1세대당 300장)에 연탄 2천100장을 전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능 코앞 高3 '신종플루 비상'

광주·전남 학생 하루 365명 대유행 … 휴교 11개교로 늘어

"시험 망칠라" 일부 학생들 감염 '쉬쉬'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2일)을 앞둔 '고3 교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부 고 3학생은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수능 준비를 이유로 확진 진단 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광주지역 학교에서 모두 266(교직원 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플루 집계 이후 1일 감염 학생 숫자로는 최다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99명이 발생해 확진환자 1일 상황 보고 이후 가장 많은 확진 학생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휴교(휴업)를 결정한 학교수도 이날 4개교가 추가돼 광주 5개교, 전남 6개교 등 11개교로 늘었다.

10월 초만해도 하루 10명 미만에 불과했던 신종플루 발생 학생수가 최근 이처럼 급증하면서 교육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2주일여 앞둔 고3생의 불안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일부 고 3교실에선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신종플루 감염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는 등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신종플루에 걸리면 수능을 망칠수 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기침 등 단순 감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멀리하는가 하면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있는 학생마저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광주 A고 3학년 오모군은 "기침을 하면서도 단순 감기라며 수업에 참가하는 친구들이 많다"면서 "불안하지만, 옆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신종플루에 전염되지 않을까 두렵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하다"며 불안해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한 주에만 신종플루 집단 발병 사례가 87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학교가 870곳에 이르렀다"며 "학교 집단 발병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증가세가 뚜렷하며, 신종플루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신속하게 등교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플루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번 주 중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제히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고3 생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동요하거나 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수능 당일 학생 환자를 위한 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부 목숨 앗아간 화물차 불법주차

광주 간선·이면도로 야간 불법 주차 몸살

동림동 인근 추돌사고 2명 사망·1명 중상

광주시내 주요 간선·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가 성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인근과 공단 주변도로, 자동차 주변도로 갓길 등 시내 곳곳의 주요 간선·이면 도로가 밤이면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산구 하남공단과 첨단지구를 비롯한 북구 문흥동·동림동 일대가 대표적인 곳이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좁은 도로나 커브길 등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야간 시간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돌 사고위험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후 7시56분 북구 동림나들목 인근 편도 3차선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공무원 김모(51)씨가 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돼 있던 18t 트럭을 들이받아 김씨 부부가 숨지고 아들(24)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 들어 이날 현재 밤샘 불법 주차로 적발된 건수(타 시·도 이첩 제외)는 모두 193건이다.

한편, 밤샘 불법 주차로 적발되는 차량은 전세버스의 경우 20만원, 시외버스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부의금 상자 통째로 사라져

26일 새벽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병원 지하 장례식장에서 현금 150만원(추정)이 든 목재 부의금함이 통째로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주 K(49)씨는 경찰에서 "부의 상자를 분향소 입구에 놔둔 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허위 고지로 20억대 보험금 날릴판

쌍나팔

○…인화성 물질을 다루면서도 난연성 제품을 만드는 것 처럼 알린 보험 계약자가 20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날릴 처지.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단열재 제조업체인 S사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H사는 S사에 2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S사의 단열재는 부직포, 폴리에스테르 등 인화성이 높은 재질로 이뤄져 있는데도 '난연재를 중간재로 사용한다'고 고지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

○…S사는 지난 2007년 4월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채팅으로 원조교제 유인 강도

대학생 등 5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유인해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A(19)군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여·1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 29일 새벽 4시께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C(31)씨를 광주 모 대학 캠퍼스로 불러내 온몸을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원조 교제를 원하는 남성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가축 마취제 이용 성폭행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여성에게 가축용 마취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한 선모(32)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A(여·27)씨에게 가축용 마취제를 몰래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A씨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 보낼테니 문자 주실래요?"

문자메시지로 수십억원 챙겨

광주경찰, 30대 등 14명 입건

"혹시~예전에 저한테 '전번'(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사진 보낼 테니 문자 주실래요?"

회사원 박모(32·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최근 휴대전화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확인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 화면은 무선인터넷으로 넘어간 뒤 한 여성의 사진이 떴다. 박씨는 스팸 문자임을 알아채고 재빨리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2천900원이 결제된 뒤였다.

'낚시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십억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3천원 이하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이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결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3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넘겨준 이모(35)씨 등 1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38곳을 차린 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려 117만 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112만명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현주' 처럼 흔한 여성 이름을 써서 아는 사람인 것처럼 스팸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유료 콘텐츠에 자동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제금액이 적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김씨 등은 또 항의하는 이들에게는 환불해 줘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